

# “피해자·국민께 사과” 고개 숙인 민주당

이해찬 대표·이낙연 의원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과  
서울시에 진상 규명 촉구  
당내 성인지 교육 강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왼쪽)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하자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의원이 공식 사과하고 나서는 등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15일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 번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낙연 의원은 “피해 고소인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처절하게 성찰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 광역단체장 두 분이 근래에 사임을 했다. 당 대표로서 너무 참담하고 국민께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리고 행정 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고하게 지켜왔다. 피해 호소인의 뜻에 따라 서울시가 사건 경위를 철저히 밝혀주시길 바란다”면서 “피해 호소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고 당사자의 고통을 정쟁과 여론몰이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 소속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차단하고 기강을 세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당규를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박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과 관련 “피해 고소인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처절하게 성찰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인을 보낸 참담함을 뒤로 하면서, 이제 고인이 남기신 과제를 돌아봐야겠다. 피해를 호소하시는 고소인의 말

씀을, 특히 피해를 하소연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절규를 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 “국민께서 느끼시는 실망과 분노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먼저 피해 고소인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소인과 가족의 안전이 지켜지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경찰과 서울시 등이 책임 있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며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란다. 관련되는 모든 기관과 개인이 진상규명에 협력해야 한다. 민주당도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날 침묵을 깨고 사과문을 발표했던 당내 여성 의원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당 젠더폭력대책TF

위원장으로, 반복되는 사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 호소인이 겪은 고통에 대해 위로와 사과드립니다”고 말했다.

당 참좋은정부위원장 김두관 의원은 이날 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우리당 지방정부에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내 성인지 교육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비위를 점검할 수 있는 기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송갑석 대변인이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 “공수처 출범 지연은 민의 배신”

통합당에 협조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일인 15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권력 기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기소하기 위한 기관”이라며 “권력 기관 개혁과 공직 도덕성 확립에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출범시켜야 할 국회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공직자의 위법·탈법 조사기관 출범을 공직자인 야당 의원이 막는 현실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통합당은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공수처 절차 진행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민의 전폭적 지

지로 만들어진 공수처인 만큼 출범 연기는 민의 배신이며 국회 책임을 받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병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공수처는 통합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과거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몽준 이재오 등 소속 의원들도 그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하루빨리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개혁은 물론 고위공직자에 대한 상식적인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가 법을 어기는 현실을 더는 묵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김성희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정기관을 넘겨주며 국가기관 설치 못 하는 국회의 무능함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통합당이 끝까지 방해한다면 사법개혁,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를 관철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통합당, 민주 서울·부산시장 무공천 압박

주호영 “불미스런 사퇴시 재보선 무공천 당헌 지켜야”

미래통합당은 15일 ‘당 소속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이 실시되는 경우 그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를 들어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무공천을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선출직이 자기 책임으로 사직한 경우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며 “최소한 자신들이 만든 당헌·당규는 지켜야 하지 않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민주당이 ‘성추행은 부정부패

가 아니다’라고 해석해 후보를 내거나 시인 후보 형태로 우회 공천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당헌·당규에 보면 (후보를) 내면 안 되는 사례라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무공천은) 여당이 하기 어려운 선택”이라며 공천 가능성을 높게 봤다.

최근 4번의 전국 선거에서 연달아 패한 통합당은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를 여권으로 기울여진 민심을 되돌릴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靑, 박원순 피소 알았나” 기밀유출 의혹 총공세

통합당, 서울경찰청 방문 진상조사 촉구

미래통합당은 15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고소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에 앞서 경찰이 고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힌 만큼 문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전달됐는지, 이후 어떤 지시를 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이 보고받았다면 대통령이 모를 리 없고,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통합당은 고소 사실이 청와대를 거쳐 박 시장에게 전달된 것이 사실이라면 성추행 의혹 자체에 버금가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수사기밀을 유출하면서까지 정

권 차원에서 박 시장의 성추문 혐의를 덮으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3일 청와대는 “8월 저녁 경찰로부터 박 시장이 고소를 당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이를 박 시장 측에 통보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또 사건 수사를 경찰과 검찰 등 통상적 수사라인에 맡길 수 없다며 특검·수사본부가 사건을 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이미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의 한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어 그 자체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검찰도 청와대 등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야당 추천 특별검사 임명과 국회 국정조사 실시도 필요하다고 목

소리를 높였다.

유이동 의원은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으로 보호받고 싶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믿는 가해자가 그 사실을 미리 알아 버렸다면 얼마나 섬뜩한 일일겠느냐”면서 “국정조사는 특검이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방법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여권에서 이번 사건 고소인을 ‘피해호소여성’이라고 지칭하는 것도 혐의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해 2차 가해를 조장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수사와 피소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정의당 조문 갈등 심화

심상정 사과에 박원석도 “유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을 둘러싼 정의당의 내용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류호정, 장혜영 의원의 조문 거부에 대한 심상정 대표의 사과 표명이 당의 뇌관인 진영 논란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15일 정의당 당원게시판에는 류호정 의원에 대한 ‘당원 소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당원 소환은 당원의 요구에 따라 당 소속 국회의원 등 공직자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출당하는 조치다.

심 대표의 사과에 따른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과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혜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당내 이견이 있다. 이견을 좁히며 힘을 모을 때”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여의도 브리핑

### 이용빈, 5·18 유공자 공법단체 설립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은 15일 5·18 유공자들의 공법단체를 설립하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법률 제정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5·18민주유공자(유족) 중 생계근란자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생계유지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중에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추천된 1인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는 사업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